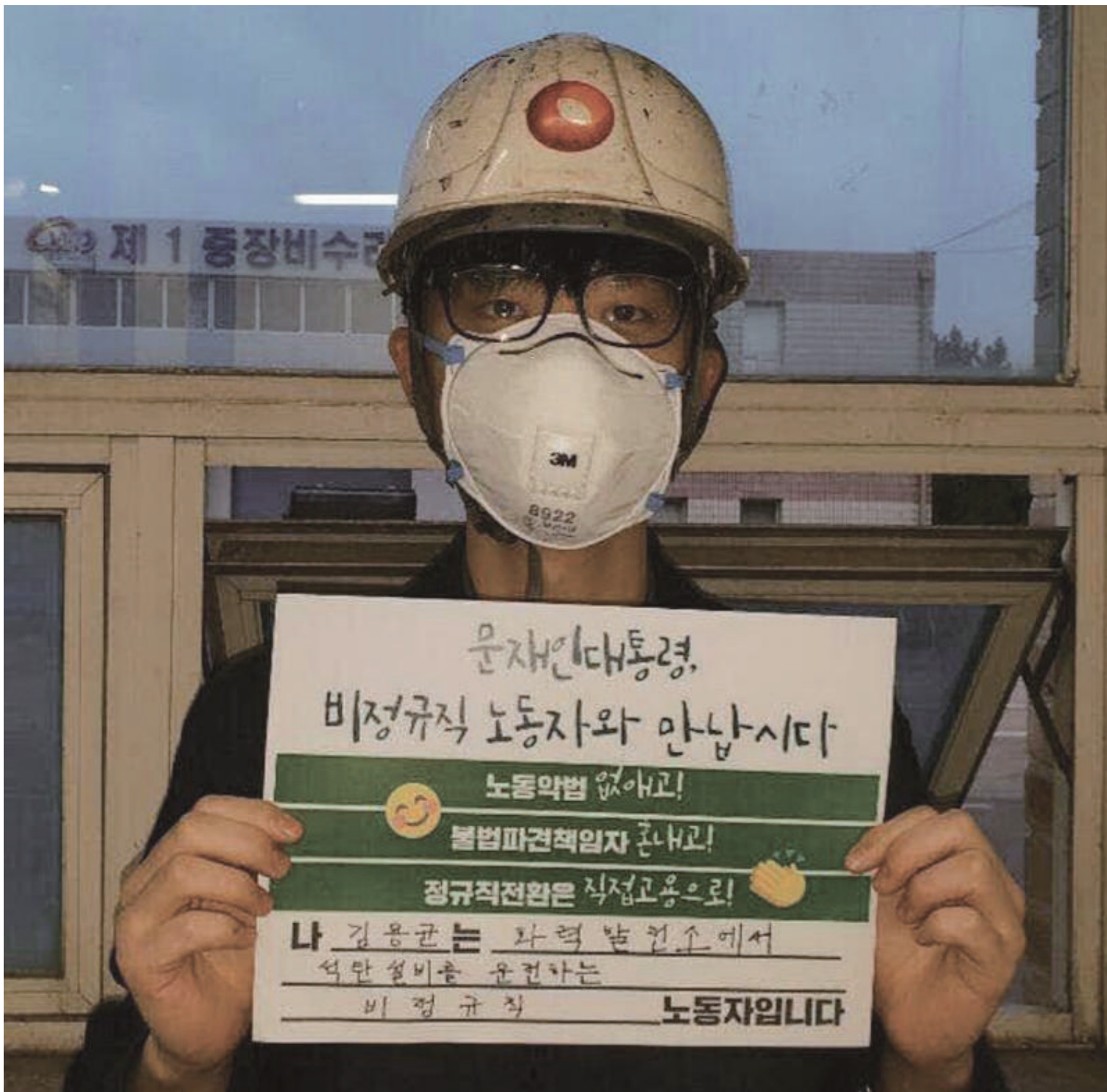


발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을 애도하며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젊은 발전 하청노동자 사망
외주화로 증가된
산재의 하나

3면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어디로?

4~5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12면

강릉 KTX 탈선 사고
이윤 지상 정책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다

2면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0퍼센트
보건의료노조의
항의

10면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기성정치에서
좌파 밀어내기

5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난민 인권단체 후원
“사회 공헌”은 추악한
이미지의 세탁일 뿐

6~7, 11면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이재환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측에 긴급안전개선 권고를 내렸다. 경강선 전 구간을 점검하라는 것이다. 개통하고 1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이 천운인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평창 올림픽 개최일에 쫓긴 시급한 개통과 철도 상하 분리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근본에서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사고다.

이미 지난해 9월 13일에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다가 열차 두 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관련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연대> 223호) 안전보다 업무 효율화를 우선해 일어난 참사였다.

한 전기 노동자에 따르면, 다른 신설 노선에서도 개통 일정을 맞추려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철도 시설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열차 운영·선로 유지 보수(철도공사)를 분리 운영하는 상하 분리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업무들은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 철도



정권마다 인력 확충과 안전 투자 외면한 결과

는 특히 그렇다. 그래야만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진작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상하 통합’에 찬성했던 문재인은 취임 후 2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민영화를 지지한 관료들이 최근 승진했다.

새로운 노선의 개통으로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선로는 늘었지만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한 전기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정밀 점검을 1년에 한 번 보통 점검으로 변경하고, 하루 한 번 도보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 도보 점검으로 변경했다.”

차량 정비 분야도 마찬가지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 정비 주기가 늘어났다. 비용을 절감한다고 최저가 입찰을 받으니 부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안정적인 열차 정비는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화에 한 번 꼴로 기관차·전동차가 고장났다.

선로 보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직영과 하청 노동자들 간에 협업이 안 돼 선로 보수 시설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들도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됐다. 오영식 사장도 말로는 코레일과 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을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되레 후퇴했다. 최근에는 무리한 강제전보 발표로 노동

자들이 반발했다. 마땅히 해야 할 개혁에 손도 안 댄 오 사장의 사퇴를 노조가 아쉬워할 까닭은 없다.

이윤보다 사람

이번에 사고가 난 KTX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은 단 3명뿐이었다. 이 중 1명만이 안전 담당자였다. 나머지 2명은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승무원임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다른 KTX 열차들의 현실도 비슷하다.

자회사 소속 KTX 승무원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철도노사 전문가 협의체도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차

갑게 외면했다.

문재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어느 대통령의 유체가 탈 화법이 떠오른다고 하면 과언일까.

인력 감축과 외주화 흐름의 배경에는 역대 정부들의 민영화 드라이브가 놓여 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철도·발전·가스를 민영화하려다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조 파업을 탄압하면서 철도를 공사로 전환하는 데까지(철도청→철도공사) 성공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위주의 철도 운영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의 상하 분리는 나중에 매각(민영화)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전 포석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영화를 위한 공사 경영 효율화의 명목으로 인력 대폭 감축하고 외주화를 확대해 왔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우파 정부들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철도의 우선순위는 생명과 안전이 아니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면서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은 약화돼 왔다.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인력 감축, 외주화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에 맞서 투쟁해 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철도 공공성 강화와 안전 확보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향상과 따로 갈 수 없다. 후퇴한 노동조건을 회복하려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이번 사고가 더 큰 참사의 예고편이 될까 봐 불길하다. 정부는 말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외주화 등 수익성 제일주의 정책을 당장 멈춰라. 또,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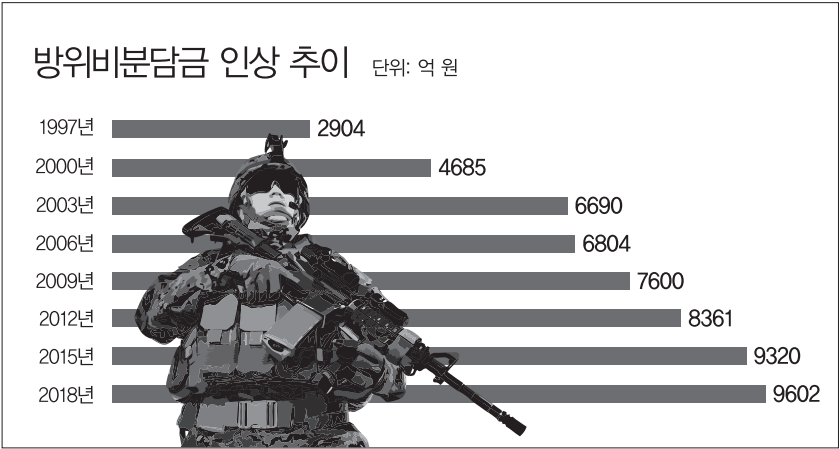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김영익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몇 곱절 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맹국한테 군비 분담을 요구해 왔다. 자국의 재원만으로 패권 유지에 필요한 군비를 다 짊어지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위비분담



주한미군과 평화는 공존 불가능한데, 돈까지 쥐야 하더니

금을 매년 대폭 인상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들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동맹국 정부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 한국한테는 아예 자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사드 유지비까지 방위비분담금에서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일정 수용할 태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한 데다가, 주

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용인해 줬다. 인상폭에서 이견이 있을 뿐,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율로는 11년 만에 최대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 정상 회담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추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중요하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인식을 나름으로 공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후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바깥 문제(예컨대, 대만 해협 분쟁)에 “유연”한 개입이 가능한 군대로 변모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방한한 트럼프한테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댔음을 상기시켰다. 그만큼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이 기여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그 기지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규모가 제일 큰 데다가,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 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위한 비용은 중국에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한다. 게다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단계적 군축까지 약속한 마당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수입 증대는 완전한 모순이다.



“오늘 또 동료를 잃었습니다” 12월 11일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관 비정규직 대표 100인 기자회견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신정환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인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공공분야에 외주화가 도입·확대되면서 산업 재해, 그것도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이윤 확보를 사람과 안전보다 우선한 결과다.

발전소에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9년 이후다. 특히

2013년부터 정부는 발전 정비 분야에 신규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비산업 경쟁도입 1단계' 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정책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박정 민주당 의원은 발전5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전소 산업재해에 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발전소에서 346건의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이 중 97퍼센트(337건)가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 11일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하청 노동자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19명이었다.

사고가 나면 발전사와 용역업체는 사고를 노동자의 과실로 떠넘긴다. 필자가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내부를 취재했을 때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그 표지판에는 사고 원인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라고 적시

돼 있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 “이제 더 이상 죽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외치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에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 넘는 지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다시 “죽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2인 1조로 운영만 됐어도 그렇게 무모하게 일을 하다 죽진 않았을 겁니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은 지 6시간 만에 발견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필수공공재마저도 돈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충원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조차 안 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력이 증원되면 점검구역이 줄어들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구조가 문제이고, 이는 외주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업체 입찰금을 계산하는] 발전사에 인력 증원 요구를 하면, 발전사는 ‘기재부에서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 승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발전사가 비용 절감(인건비 삭감)을 위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확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외주화로 인해 사고가 증가한 거예요.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년 전인 2017년 11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근로감독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결국 사고가 또 반복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벌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외주화가 발전소 산재 사고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이번 주에 업데이트됩니다.

★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한국잡월드 투쟁이 자회사 수용으로 귀결된 것은 결코 필연적인 게 아니었다. 놀라운 투쟁을 발휘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지켜본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이 투쟁이 왜 자회사 수용으로 막을 내렸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잘못된 교훈으로 미루어질 수 있다.

★ **전교조 임원선거 결과:**
온건파 지도부가 6년 만에 당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는 불만과 분노로 바뀌고 있지만, 전교조 임원선거에서는 오히려 정부와의 협상을 강조하는 온건파 지도부가 당선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좌파 경향이 배출한 집행부가 좌파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다음은 어디로?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해서 양보책을 내놓지만, 운동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내 중도 진보 언론은 초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노란 조끼 운동을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인 양 보도했다. 그러다가 운동이 커지고 대통령 마크롱이 후퇴하자, 이제는 혁명 운운한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접근법이다.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 찰리 킴버가 현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노란 조끼 운동의 성격과 전망을 설명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 마크롱은 약간의 양보로 '노란 조끼' 운동을 분열시켜 깨뜨리려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마크롱은 국영 TV에 출연해 시위대의 분노를 들었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그 분노가 깊고 여러 면에서 정당하다고도 했다.

마크롱은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한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더 나아가 국가 재정 투입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인상하고,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로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10년 전 우파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시행한 것이다.

연금 생활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도 일부 취소됐다.

마크롱은 이에 더해서 사용자들이 모든 직원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가장 큰 분노를 산 정책인 부유세 감축은 되돌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11월에 했더라면, 솔깃하게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노란 조



마크롱의 때늦고 불충분한 양보는 노란 조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12월 8일 파리 노란 조끼 시위

끼 운동은 그 정도 자잘한 요구를 넘어서지 오래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 대다수는 마크롱의 양보에 시큰둥하다.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게트를 통

째로 갖고 싶습니다.”

마크롱의 기만적 후퇴를 보며 노란 조끼 시위대의 가장 투쟁적인 사람들은 분노했다. 양보안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이다. 물론 마크롱의 후퇴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무했다. 투쟁하면 쟁취할 수 있다

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12월 15일 노란 조끼 반란의 “행동 V”가 예정돼 있다. 이 행동은 4주간 거리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벌어진 투쟁, 그리고 점증하는 노동현장 투쟁의 뒤를 따르는 행동이다.

파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그리

항의 시위가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

1968년 5월의 반란 때 학생 지도자였던 다니엘 콩방디는 이렇게 주장했다.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의 대다수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에서, 극우 저수지에서 왔다.”

이런 비방은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 다수가 지지하는 요구들만 봐도 쉽게 반박된다.

노란 조끼 운동 안에서 제출된 요구안은 여러 버전이 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을 결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부자들에게 대한 과세 대폭 증액, 서민 복지에 더 많은 재정 투입, 마크롱 퇴진, 민영화 중단 등이다.

프랑스 북동부 도시 코메르시의 노란 조끼 모임은 “전국에서 민중회의를 구성하자”고 호소하는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평범한 사람들과 멀리받는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과 지배자들에게서 권력과 돈의 힘을 되찾아오는 새로운 질서”를 바란다고 말한다. 노란 조끼 시위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 안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영향력 경쟁을 벌인다.



“마크롱, 너는 끝났어”

그러나 보편적 추세는 왼쪽으로, 파업 노동자들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점점 커지는 청년들과 단결하는 방향을 가리고 있다.

이 반란을 심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 방식은 시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생산과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거리 시위와 청년들의 운동과 연결된 대중파업이 확산되면 마크롱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노동총동맹(CGT)은 12월 14일 금요일 행동의 날을 조직해 왔다. 이날 철도 등 공공부문의 중요한 부분에서 파업도 벌어질 예정이다.

이런 행동은 모두 환영할 일이다. 기층의 수많은 노동조합원들은 이미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이거나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투쟁에 더 힘을 신기를 매우 주저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운동의 얼굴이 되려 애쓰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더라도 그 전에 운동을 멈추려 할 것이다.

노동총동맹과 노동자의힘(FO)의 지도자들은 12월 9일 일요일에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던 트럭 운전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을 취소했다.

파업이 예정대로 실행됐다면 정부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서민 세금 올린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12월 8일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재앙적인 기후변화에 맞선 대규모 행진도 열렸다.

프랑스 정부는 해로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유류세 인상의 본질을 위장하려 했다.

마크롱이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번 달을 허비하면 세계가 결판날 것”이라며 유류세 인상의 본질을 위장하자, 노란 조끼 활동가들이 대응했다.

노란 조끼 운동이 기후변화 문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만들려던 정부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일부 노란 조끼 활동가들은 기후변화 행진에 참가했다.

노르망디 지역에서 도로 봉쇄에 참가했던 베노는 기후변화 행진에 참가하려고 동료들과 함께 파리에 왔다.

베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후를 위해서, 자본주의의 과도함에 반대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란 조끼입니다.”

고 투쟁의 단결과 총파업을 촉구하는 호소가 늘어 왔다.

노란 조끼 운동은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저항에도 영감을 줬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에 고무된 이라크의 시위대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이집트 독재자 압델 파타 엘시시는 2011년 이집트 혁명 기념일인 1월 25일을 앞두고 노란 조끼 판매를 금지했다.

영감

탄압은 운동을 꺾지 못했다.

12월 8일 프랑스 국가는 시위를 막으려고 경찰 9만 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파리에서만 경찰 8000명이 최루탄 18만 발을 쏘고, 장갑차 12대가 배치됐다.

전국에서 1200명이 체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도 분노한 시위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 파리뿐 아니라, 마르세유, 디종, 보르도, 릴, 낭트, 스트라스부르, 니스, 캉, 상테티엔트, 툴루즈, 몽펠리에 등지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노란 조끼 운동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가 폭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마크롱은 속임수 양보로 운동을 무마시키지 못한다면 더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도 이용하려 할 것이다.

TV 연설에서 마크롱은 불길한 말도 했다.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확립, 이민, 이른바 세속주의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투쟁이 더 단결하고 더 전투적이게 된다면 마크롱의 책략을 물리치고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달이 지나면 세계가 결판나고? 같은 놈이 책임자이다. 하나의 투쟁.” 기후변화 행진에서 인기 있던 배너다.

일부 행진 참가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이런 구호를 적었다. “부자들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돈을 내게 하라.” 릴에서 벌어진 행진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녹색인 조끼를 입었다.

노동계급 사람들과 서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그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극히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노란 조끼와 환경운동가들의 단결은 매우 중요한 한 발 전진이다.

기후변화 행진이 끝난 뒤, 기후변화 행진 참가자와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함께 마크롱 퇴진을 외쳤고 경찰 폭력에 함께 맞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34호 / 번역 차승일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김문성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입원은 적법한 강제 진단 시도였다고 해명한다. 또, 지역 개발 공약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 방식이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 부인 트위터 이용 의혹, 조폭 연루설은 불기소했다. 몇 달간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사안들이 모두 증거 부족과 무혐의로 드러난 것이다.

검·경, 언론이 반년간 발가벗겨 조리둘려 망신을 준 사람의 사생활 측면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선별 기소를 한 것만 봐도 (여권발) 여야 합작 연출의 반(反)이재명 캠페인의 불순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물론 불기소된 건들도 이대로 끝나는는 보장이 없다.)

기소된 사안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민주당 용인시장 백권기는 이 지사와 비슷한 지역 개발 공약 관련 허위사실 공표건을 놓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다른 선거법 위반 건으로 기소됐지만). 같은 수원지검 사건이다!

직권남용 문제도 그렇다. 직권남용의 달인인 이명박과 김기춘은 최근 재판에서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은 한국당 권성동과 염동열도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증언했는데도 직권남용 무죄를 받았다. 비슷한 부정 채용 압박 사건에 연루된 친박 최경환도 무죄를 받았다.

사법 농단 재판에 대비해 법원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법원만



여권의 좌파 찍어내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그런 게 아니다. 현 검찰 지휘부 자신이 권성동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일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성동은 검사 출신이다.

위의 직권남용 혐의들은 사익이나, 민주적 권리 억압(김기춘)에 해당한다. 반면 이 지사의 경우는 직계 가족 단속 문제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열거한 재판 결과들은 적폐 청산이 증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 이재명 지사를 친문 진영이 밀어내는 모습은 시사적이다.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노동개악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쿵짝이 잘 맞아서 더욱 그렇다.

이를 볼 때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의 우경화는 단지 이재명 찍어내기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더 연장돼 좌파 일반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번질 수도 있다.

기업 투자

올해 경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 기반을 고려해 우경화를 노골화·본격화했다. 가령 문재인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 일자리의 양을 늘

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해] …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0월 4일 일자리위원회)

문재인은 12월 10일 새 경제부총리 홍남기 임명장 수여식과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하라.”(10일)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11일)

문재인이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고 말한 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했다.

친기업 기조 노골화와 더불어 일어난 다음의 일들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의료 영리화, 노동 개악의 연쇄 추진,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 노동단체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음해,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 갔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난받은 일 등등.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선 보수통합을 내세워 친박의 지지를 받은 나경원이 이겼다. 보수 혁신은 말로라도 정점이 되지 않았다.

전 원내대표 김성태는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먼저이니 적폐 청산을 중단

하라고 가증스럽게 눈물을 찼다. 이재수의 자살은 우파의 항변을 대변하는 사건이 됐다.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왜 죄인으로 모느냐는 것이다. 간판만 바꾸는 기무사 개혁으로 재생 기회를 주고, 쿠데타 모의 의혹 수사에선 발을 빼 온 현 여권이 이 ‘죽음의 항변’을 모른 척할 것 같지 않다.

계급의 이해관계라는 잣대로 봐야만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여권 내 ‘좌파’ 찍어내기, 진보 지지층 이반을 감수하는 여권의 태도, 우파의 사기 회복 현상의 상호 연관성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사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일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모인 것도 시사적이다. 이 지사 징계 문제 때문이었다. 징계를 서두르는 쪽은 재판이 늘어지다가 자칫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 유력 주자가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 같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권 지지층을 분열시킬 걱정 때문에 당원 제명은 유죄 판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1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는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을 받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지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 민주당의 우경화에 대한 당내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같은데, 이 지사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누가 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대응과 너무 다르다는 점도 지금으로선 징계를 어렵게 했을 것이다. 사건 공개 초기에 김 지사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의 비호를 받았으며, 재판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징계의 ‘ㄱ’ 자도 안 나온다. 죄질도 훨씬 더 나쁜데 말이다.

결국 현 여권의 좌파 찍어내기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신호이다. 또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공식 정치로 반영되는 데 초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 인물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성격(목적)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목소리

“우리의 결심은 단단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이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학생과 노동조합의 집회를 봐 왔습니다.

저는 12월 8일 툴루즈에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크게 표출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조끼 수천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했고, 그다음에 환경 행진 대열이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의 결심은 단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높이 쌓았고 경찰은 한 시간 정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깼 돌멩이, 근처 건설현장에서 주워온 자재,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꺼낸 병을 던졌습니다.

지하철역에 불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체포됐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에는 학교를 봉쇄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이 도시의 가난한 동네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경찰이 무슬림 여성을 인종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항의해서였습니다.

지금의 반란은 유류세 인상이 계기가 돼 시작했지만, 더는 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모두가 와서 각자의 분노와 요구를 내놓을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잘 무쳐 있습니다.

소피, 툴루즈에서

“정치인들은 부자들만 위합니다”

우리는 노란 조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달려들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대입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힘들게 할 교육 개편에 반대해 학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도 진저리가 납니다.

정치인들은 부자들과 기업들만 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지구를 불태우는 자들 말입니다.

저는 1968년 반란에 대한 글을 읽는 게 이제는 싫증이 납니다.

저는 1968년 반란을,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혁명을 원합니다.

엘리자베스(학생), 파리

이재명 지사는 지지층에 책임지려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했기에 노골적 우경화와 적폐 청산 중단은 사람들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이 우경화는 우파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진보 염원층은 실망해 이탈하고 있다(특히 20~30대 청년층).

문재인의 우경화에 실망해 이탈하는 이런 청년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정치인·세력의 형성·강화를 억

제하려는 것이 이재명 찍어내기 캠페인이 궁극으로 노리는 바다.(민주노총, 정의당 등도 음해 대상이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정책들, 기본소득이나 부자 증세,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 이익 환수, 의료 공공성 강조, 노동 존중 등을 보면,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지지 기반도 서민층이다. 그는 박근혜 퇴진 운동을 화끈

하게 지지해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자본가 계급 기반은 (특히나 경제 위기 시대에) 이런 정치인이 성장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인물·세력이 정치적으로 실망하는 청년층을 대변하지 않는다 면, 소수는 각성해 정의당이나 좌파 지지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류는 환멸 속에서 탈정치화되거나 우익 포퓰리즘의 데마고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 이는 촛불의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걸 뜻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 염원 대중이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당에게 투표하게 되면 만사 ‘OK’일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백의종군’을 약속한 것이 잘못된 이유다. 이재명은 여권 지도부가 아니라 지지층에게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

김안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이현주

최근 김안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안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를 때문에 김안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만들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김안장은 웹사이트에 ‘사회 공헌’을 큼지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1월 ‘로펌공익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 네트워크에는 김안장을 비롯한 국내 6대 로펌(대령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이 모두 포함돼 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난민인권센터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2년간 난민인권센터에 신규 채용된 활동가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대리한다는 내용이다.

난민인권센터가 2년 동안 인건비로 지원받는 금액만 총 5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대형 로펌들의 추악한 실체를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기업주와 정치 권력자들의 편에서 살고 그 덕분에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왔다.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피와 눈물을 짜낸 돈으로 승승장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대형 로펌들의 추악한 실체를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기업주와 정치 권력자들의 편에서 살고 그 덕분에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왔다.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피와 눈물을 짜낸 돈으로 승승장구해 온 것이다.

친기업·반노동·친제국주의

김안장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뿐 아니라, 유성기업과 갑을토력 등 기업들에게 노조 탄압 자문을 한 것으로도 악명 높다. 다수가 여성인 휴플러스 노조 파괴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안장은 가슴기 살균제 참사 기업 옥시를 변호해 ‘악마의 기업’으로 불렸다. 김안장은 제주 영리병원(북지국제병원)의 법정 대리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김안장과 관련된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김안장을 “노동 적폐 5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김안장 해체를 주장했다. 이런 로펌이 “난민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자은 일이다.

대형 로펌들의 핵심 고객은 삼성, 롯데, SK 같은 대기업들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의 핵심 공범들의 변호를 주로 대형 로펌들이 맡아 국정 농단 ‘특수’를 누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예컨대 업계 2위 태평양은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 1심 사건 변호를 맡아 엄청난 수입료를 챙겼다.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양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법률자문을 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다.



김안장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피와 눈물을 짜내며 업계 1위가 됐다

그런데 UAE 원전 수출은 한국 정부의 UAE 파병과 한쌍이었다. UAE에 파병된 아크바대는 UAE-사우디 연합군을 군사 지원하고 있다! 이 연합군이 예멘을 생지육으로 만들어 난민을 양산했다!

로펌 세종은 쌍용차, KTX 승무원 소송에서 모두 사측 대리인이었다. 이 소송은 모두 사법 농단에서 주요 재판 거래 대상이었다.

화우는 한진그룹 사건을 다수 맡아 왔는데, “땅콩 회항” 조현아의 변호인단에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로펌 바튼은 이명박 정부를 곤혹케 하는 사건마다 구원 투수로 등장해, 이명박 정권의 대리인으로 불리며 급성장했다.

요컨대, 대형 로펌들은 이 사회 절대 다수인 노동자와 피차별자들의 인권과 이익에는 관심 없다. 사회 공헌은 입발림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를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권력자들을 변호해 벌어들이는 부의 극히 일부를 갖고 친기업·반노동 본색을 가리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 임성택 변호사는 올해 초 이렇게 말했다. “공익활동이 화제가 되고 로펌의 평판과 마케팅에 영향을 끼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안장의 매출액은 1조 144억 원이었다. 그중 0.0001퍼센트

도 안 되는 돈을 들여 이런 부가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미지 세탁

그런 점에서 난민 운동 단체가 대형 로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인권 단체가 김안장 같은 반인권 선봉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인권 감수성”이 형편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 난민 인정률이 극히 저

조하고 소송단계에서의 신청자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면 시점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의 도움을 받게 돼 기대가 크다.”

재정은 충분치 않고, 당장 소송에 돌입하는 난민을 도와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체계적 모금 활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 없는 돈은 없다. 체제를 변호하는 기업의 돈을 받으면서 자본주의 기업과 정부를 비판하기는 힘들다. 기자들의 ‘존치’ 수수가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요즘은 기업 광고 주수가 그 자리를 합법적으로 차지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중적 지지불식간에 기업의 이미지 세탁에 이용당하게 되는 (운동 건설이라는 편견에서는) 개념 없는 행위다.

무엇보다 기업에게서 후원을 받는 것은 난민 연대 운동을 대중 운동으로 성장시키는 데 대단히 해악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난민 인정률을 더 낮추려 한다. 개혁입법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 등을 속죄양 삼아 노동계급의 불만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난민 운동 측이 난민 인정률을 대폭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려면 만만찮은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난민 연대 운동은 난민 자신이 스스로 활동하고 투쟁하게 되도록 활동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재고해야 한다. 개혁입법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보완할 때만 효력이 있는 전술이다. 미국과 서유럽에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이 없어서 지금 인종차별과 난민 배척 운동이 횡행하는 것일까?(Green Left Weekly ‘Limits of anti-discrimination law’ No. 1159, October 27, 2017을 보라.)

그러면 반인권적·반노동적 로펌 김안장 등의 후원을 받아 하는 활동이 서



대형 로펌들은 사회 공헌으로 본색을 감추고 싶어한다

민과 노동자들에게 골개 보일까. 오히려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서민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중적 난민 연대 운동을 건설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위’와 소통하면 할수록 ‘아래’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김안장은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대변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는 제국주의 문제에서 비롯했고, 특히 한국인은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지배와 전쟁, 난민법을 개악하고 싶어한다. 경제 침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 등을 속죄양 삼아 노동계급의 불만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난민 인권 단체가 김안장 등의 후원을 받는 것은 반제국주의의 감수성도 결여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적절한 동맹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인권 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정치 권력자들 일부와 동맹을 맺는 일이 새삼스러워 일어난 게 됐다. 몇몇 성소수자 단체들이 구급 같은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는 일도 그중 하나다.(인권운동 지도자들이 국가와 자본과 문제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다루는 본지 223호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를 보시오.)

그러나 자본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인 기업과 국가는 결코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 내는 불의와 불평등, 전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난민인권센터 등이 이런 곳의 후원을 받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진실을 가리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난민들의 삶과 조건의 실질적 향상을 염원하는 활동가들은 일부 난민 단체가 김안장 등의 후원을 받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은 난민 연대 운동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해 무감각한 활동 방식은 난민 연대 운동과 진보운동 모두에 해롭다. ‘위’로의 연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는 건 경제 침체가 탓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정치 권력자들 일부와 동맹을 맺는 일이 새삼스러워 일어난 게 됐다. 몇몇 성소수자 단체들이 구급 같은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는 일도 그중 하나다.(인권운동 지도자들이 국가와 자본과 문제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다루는 본지 223호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를 보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앞에서 얘기한) 난민 자신의 활동이다.

김안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자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받아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베스트 CSR 프로그램’ 상을 받았고, <뉴스위크>가 선정한 ‘환경친화기업’ 전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인도에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정작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값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도에서 소송까지 벌였다. 한국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대형 로펌 김안장은 민주노총이 “노동적폐 5적”의 하나로 꼽은 로펌이다. 김안장은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공익단체’들을 후원하고 사회화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홍보한다.

다만 대형 로펌들도 공익재단을 운영한다.

기업은 “사회 공헌”이 (기업 홍보PR의 일환으로서)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엔지오인 아름다운재단은 “기업 사회 공헌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

“사회 공헌”은 기업들의 부패를 가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2013년 현대산업개발은 4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청긴 것이 드러나 ‘입찰 참여 5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70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을 약속해 입찰 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공익재단은 사주의 기업 지배 유지에도 유용하다.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들은 상당한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계열사 간 합병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매입해 줬다. 이재웅 경영 승계에 이용된 셈이다.

사회단체는 사기극에 동참해선 안 된다

일부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사회를 위해 돈을 쓰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중 일부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환경재단 이미징 상임이사는 <경향신문> 기고 글에서 “솔단지 하나도 세 다리가 맞아야 바로 선다”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협치)’를 강조했다. 사회단체가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므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값싸게 대신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만큼의 책임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민영화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들은 상당한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계열사 간 합병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매입해 줬다. 이재웅 경영 승계에 이용된 셈이다.

기업들은 진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특히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노동자 임금을 어떻게든 쥐고 싶어한다. 법인에 인성과 부유세 신설에 결사반대한다. 그들은 안전과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애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과 권

력에 도전하는 노동자 투쟁과 급진좌파 단체들을 결코 후원하지 않는다.

사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솟아오른 국제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저항의 일부를 흡수해 순치시키려는 것이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이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인 한 여성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미 오래 전 <부의 복음>(1889)에서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들이 적절한 곳에 기부를 하면 사회적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카네기는 정부에 돈을 대가 보다는 자선 재단을 설립하라고 부자들에게 조언했다. 사회를 친기업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수전 주위의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민영화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들은 상당한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계열사 간 합병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매입해 줬다. 이재웅 경영 승계에 이용된 셈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추악한 본질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추려 한다. 온건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기업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거나 적어도 헛갈리게 만들 수는 있기를 바라며서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를 흐리고, 지배자들에 맞서 일관되

게 싸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기업 후원을 받으면 그들의 비위와 부패, 악행에 대한 비판도 무더지게 된다. 재정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를 의식해 분명하게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후원은 아래로부터의 단결된 운동 건설에 해롭다. 예컨대, 김안장의 악행에 분노하는 노동자들, 강제 징용 피해자들, 가슴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김안장의 돈을 받는 단체나 운동이 말하는 인권, 차별 반대, 민주주의 같은 구호의 진정성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전경련은 지난해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지출액이 30퍼센트 늘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든다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부조리와 고통을 뿌리뽑고 싶다면 이것을 만들어 내는 근원인 이윤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최대 수혜세력 자본가들에게도 맞서야 한다. 차별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려는 운동과 활동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화를 공개적으로 걷어차야 한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정진희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설복>,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진호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 수천만 원대 급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폭로했다. 양진호가 부하 직원에게 보낸 2015년 2월 7일자 메시지를 보면,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 원]을 보냈다. 또, “성남지검(성남지청의 오기)에 벌여먹을 검사를 처벌일 돈 5000[만 원]을 자신의 소유 회사 “임모 대표를 통해” 보냈다고 썼다.

당시 양진호는 A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이 사건은 양진호를 불기소하는 것으

로 끝났다. 양진호 대신 위디스크 대표 이사였던 임 모와 법인인 기소돼 각각 700만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진호 불기소 처분이 뇌물을 제공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공동취재팀은 양진호가 “임 대표를 통해 검·경을 상시 관리해 온 정황”도 폭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위디스크는 2013년부터 명절에 200만~3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검찰과 경찰에 뿌렸다.

11월 말 MBC는 웹하드 업체들의 협회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 이하 협회)가 경찰 단체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11월 6일 전직 웹하드 업체 개발자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11월 29일 MBC는 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 메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 있었다. 이 영장에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향후 압수 목록이 담겼다. 다음날 MBC는 웹하드 업체 임원들이 각 업체 단체 소식지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이 옮겨왔다

최근 드러난 양진호의 검·경 로비와 MBC 보도는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이 옮겨움을 보여 준다. 이 시위는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수사에 미온적인 수사기관을 규탄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웹하드 업체들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의심해 왔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거침없이 비판한 여성들의 전후적인 대중 행동이 끝난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그제서야 ‘웹하드 카르텔’ 수사에 착수했다.

12월 22일 ‘불편한 용기’가 6차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것은 현명했다. 비록 운동의 압력 덕분에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속박공유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대표 심명섭의 수사가 단적인 예다. 그날 MBC는 웹하드 업체 임원들이 각 업체 단체 소식지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지금 임사정하고 따로

매기했는데 성남지검에

벌여먹을 검사들 처벌일돈 오천이 다음주에

임 대표님통해서

나간다

아 가까운 피갈은돈이 그 씨새들 주동으로 들어가다니

암튼 송사리건으로

뒷거래 양진호의 검찰 로비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회장님’이 양진호다>

수색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 전에 웹하드 업체 지분을 자신의 처·형·조카들에게 넘겼다(MBC 보도). 웹하드 업체들이 검찰, 경찰, 법조계, 주류 정치권(특히 민주당)과 유착했다는 세간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운동의 압력 덕분에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 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성들의

부노는 식지 않고 있다.

최근 ‘불편한 용기’ 측은 “7만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소리쳤지만, 그들이 보여 준 ‘변화’는 보여 주기 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12월 22일 6차 광화문 집회에서 “한

국 여성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의지와 단결을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우리도 이 분노와 저항의 의지에 연대

하자.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박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조치) 압박에 반대해, 12월 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7일과 10일에는 각각 전면 파업과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 4.1퍼센트 인상, 실적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 폐지(단일 호봉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10월 중순에 치러진 노조 선거에서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원하청 연대를 공약한 좌파 지도부를 선출했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계속됐지만 이전 노조 지도부가 거듭 사측에 양보하며 고용·조건 후퇴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반영이다.

지난해에 대우조선이 6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 나고 올해에도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부분적으로 회복한 듯하다.

불균등성

한국 조선업은 올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1월 현재 수주 잔량도 지난해 말보다 27.8퍼센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그 규모는 조선업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던 2016년 수준에 그친다. 아직 업황 회복을 말하기에 이른 데다, 조선업체들 사이에 불균등성도 크다.

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형 조선소들은 매각 추진과 무급휴직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1~3분기에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 연속 적자를 본 삼성중공업은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신청자가 사측 계획보다 적어 추가 인력 감축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대우조선은 다른 업체들보다 실적이 좋다. 12월 10일에도 주력 선박인 LNG선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사진: 대우조선노동조합 전국지회

“죽도록 일해서 쓰러져 가는 회사를 정상화 시켰는데, 또 임금을 양보하라니 말이 됩니까” 12월 4일 파업 집회

치의 85퍼센트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목표치의 100퍼센트를 수주하면 영업이익이 1조 원가량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감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대폭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경이다. 사측도 이 점을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대우조선 사장 정성립은 ‘매출이 회복된 만큼 추가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2016년에 마련한 자구안대로 ‘정규직 1000여 명을 더 줄여야 한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 경기 침체기에도 산업·기업별로 불균등성이 있다. 그리고 특정 부문의 경기 회복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사측이 콘크리트같이 견고하게 뭉치지 못하고 분열하는 상황도 투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터져 나오는 불만

파업 집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대우조선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성과를 일군 주인공들은 정작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며 말이다.

“4년을 참았습니다. 3년 연속 기본급 동결, 임금·성과급 반납, 인력 감축, 고통이 말도 못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쓰러져 가는 회사를 정상화시켰는데, 또 임금을 양보하라니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2014년 즈음과 비교하면 임금이 2000만 원가량 깎였습니다. 예전에 3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오늘도 배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미 7500억 원 이상 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생한 대가를 줘야 합니다.”

“상여금이 월할 분할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3~10년차 조합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은 400~500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그 수가 8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열 받은 젊은 조합원들이 선거에서 강성 집행부를 지지했습니다. 파업에도 나오고 있고요.”

노조는 산업은행 앞에 농성장을 차

리고 조합원 수백 명을 동원해 상경 집회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돈줄을 꽉 쥐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정부 소유 기업이므로 정부가 직접 인건비·인력·노동조건 등을 관장한다. 대우조선의 실적이 회복됐는데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해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은 말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사채업자입니다. 사사건건 교섭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피를 빨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책임

대우조선과 중형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경남 지역에서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정규직 노조가 임금·조건을 양보하는 대신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운동 내에도 있다.

그러나 위기에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임금·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위기 구조조정의 고통에서 노동자들을 구하는 데 돈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우조선지회는 당분간 파업을 지속하고 2~3차 상경 투쟁도 이어 나갔다고 밝혔다. 지회장 등 간부 2명은 11일 공장 안 크레인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층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파업 대오가 수천 명씩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크지는 않죠. 그래도 조합원들이 맨날 양보만 하던 집행부를 갈아치웠고 젊은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어요.”

대우조선 노조 투사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이런 긍정적 변화를 더 진척시킬 수 있길 바란다.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서지애 전교조 교사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교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제자로 나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학생들의 정서적·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돌봄 자체의 질을 높이려 하기보다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학비노조 안종화 전국돌봄본

과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돌봄교실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2014년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3500명을 채용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5000명을 시간제로 채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돌봄전담사들도 저임금 단시간 고용을 고집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대해 불만을 쏟아 냈다.

“경기교육청 돌봄전담사 2900여 명 중 15시간 미만 일하는 전담사가 무려 1300여 명이다. 초과근무가 잦은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초과수당도 받지 못하고 무조건 하루 2.8시간만 근무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만일 독감으로 5일 쉬게 되면 그 달은 15만 원이 빠진 45만 원만 받게 된다. 그러니 아파도 참고 나가야 한다.”

“교육청은 방학 중 점심시간이나 평상시 쉬는 시간 등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전혀 쓸 수 없다.”

“충남은 아직도 위탁 형태가 있다. 경기는 근무시간이 13단계이고, 임금체계는 199단계이다.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다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아야 하나?”

단시간으로 고용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삶은 불규칙해지기 일쑤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5분 대기조’라는 말도 나온다. 갑자기 수업 시간이 단축되거나 학교 일정이 바뀌면 개인 일정을 미루고 출근해야 한다.”

▶ 9면으로 이어짐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정선영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법안 반대 시위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비호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우익들의 기를 살려주고 있음을 이번 사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아직 끝이 아니라며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홍영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함께 말했다. ‘반노동’ 악법을 추진하면서도 유치원법 개정으로 반동성을 희석시키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치원법은 우파들과 타협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누더기가 돼 왔다. 애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랬다. 이제까지 사립 유치원에 ‘지원금’으로 주던 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 ‘지원금’은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을 제 돈처럼 써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립 유치원의 관행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버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러 차례 후퇴했다. 결국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낸 수정안(‘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항목을 빼고, 처벌 수준을 크게 낮추고, 법 시행은 1~2년 유예하는 안)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 반대했다. 그 결과 법 개정은 좌절됐다.

언제나 갈팡질팡

유치원법이 누더기가 되다가 좌초된 과정은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혁 열망은 컸지만 민주당에 의존하는 태도는 결국 개혁 실패로 이어졌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혁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사립학교들의 비리 실태에 대한 공분은 컸다. 비리 재단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당시 당명은 열린우리당)은 최대 20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탄핵 반대 대중 시위의 여파로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민주노동당도 10석을 얻었다. 이 때문에 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사학재단들과 우파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매우 거세게 저항했다. 당시 사학재단들은, 지금 유치원 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중단하라며 학교 폐쇄 등을 협박했다. 사학재단들, 사학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기총 등 보수 종교계, 우파진영은 수만 명 규모의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런 우파들의 압력 속에 열린우리당은 후퇴와 양보를 거듭했다. 결국 2005년 12월 9일 진보진영이 요구하

던 것보다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가 대표였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그조차 거부하며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2006년 1월 30일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고 한나라당과 약속했다. 이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재개정안이 발의돼 2007년 7월 통과됐다. 민주당의 후퇴와 배신으로 개혁은 좌초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노동자·대중의 개혁 염원보다 우파와의 타협을 중시할 것은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늘 갈팡질팡했다. 피억압 대중의 지지를 붙잡기 위해 개혁 제스처를 취하지만 자본가 계급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파와 다름 바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노동자 계급을 달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편에 섰다.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노동자 운동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 노동계급이 참가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우파의 압력이 커질수록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악순환

당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안을 중심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민주당과 타협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다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고, 효과적 행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배신할수록 우파는 기가 살고, 그럴수록 노동자 운동이 민주당을 밀어 쫓아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공식 정치 지형이 우경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지금도 비슷한 동역학이 작동하는 것 같다. 비리 유치원 개혁을 바라는 여론은 높다. 이런 압력 속에 민주당은 몇 가지 개혁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유치원 3법 처리 과정에서 보듯

이, 우파의 압력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런 후퇴를 비판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것은 유감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고, 그러려면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배신으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고, 그 결과로 공식 정치가 우경화하는 악순환이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운동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혁을 위해 투쟁한다면 말이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대중 투쟁의 힘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유치원 비리 문제도 대다수가 노동계급 가정에 속하는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비를 유치원장(소자본가)들이 가로채는 것에 맞선 싸움이다. 자본가 계급에게 기반을 가진 민주당은 유치원장들과 우파의 압력에 타협하기 십상이다. 유치원 개혁을 위한 진정한 이해관계는 노동계급에게 있다.

▶ 8면에서 이어짐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고용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고통받고 있다.

“초단시간 전담사의 교실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은 하루에도 담당 교사, 특기적성 강사, 돌봄전담사로 보육자가 하루 세 번 바뀌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학부모들도 전일제 전담사의 안정적인 교실을 선호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실을 기피한다. 이런 학부모들의 불만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쏟아지기 십상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돌봄전담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교육청들은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주 15시간 미만 일해 온 노동자들을 주 20시간 고용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 10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도 (2.8시간에서 4시간으로), 그동안 교사가 맡고 있던 행정 업무를 전담사들이 다 맡으라고 한다. 그러나 5시간 이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하루 4시간짜

리 시간제 일자리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불충분하다.”

“전남교육청은 내년에 초단시간제를 5시간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전일제 전담사는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온종일 돌봄’이 전혀 아니다.”

“정부가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시설비로 내려온 예산은 넘쳐나지만, 인건비 확대는 전혀 말이 없다.”

정규 교사로서 토론에 나선 나는 이렇게 발언했다.

“돌봄은 아동의 전면적 인간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동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되면, 돌봄을 받는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된다. 시간제 전담사의 공백을 교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전담사들의 전일제, 진짜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단결해 노

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정부·여당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돌봄 확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돌봄을 맡는 전담사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돌봄전담사 문제에서도 말뿐이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돌봄교실도 불가능하다. 전일제 고용을 요구하며 싸우는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다. 그 과정에서 남인순 법안이 만들어졌다.

남인순 법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속 빈 강정이다. 공공인프라 확충 언급이 없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경영평가 실시와 사업별 회계 구분도 문제다. 사회서비스원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잣대로는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의 질을 높이기도 어렵다.

사회서비스가 노동계급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도 남인순 법안은 문제적이다. 보육과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여성들의 삶과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투자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겨진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경력이 단절되고, 마땅한 공공요양 시설이 없어 갖은 수고를 들여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더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다수도 여성이다. 수익성이 잣대가 되면 이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바 있고, 오랫동안 주류 여성 운동에 몸담아 왔다. 여성운동 출신 국회의원이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서비스 문제에 관해 이토록 불충분한 법안을 내놓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로 별 성과 못 거둬

남인순 법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의 다수가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직무급제와 연계시키려 한다.

게다가 민간에 이미 위탁된 국공립 시설은 사회서비스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대부분의 국공립시설은 여전히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염원과 달리 기존 민간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 등을 참여시켜 대화 모양새를 취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추가 재정 지원, 임금 지급 기준, 우선위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이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사단법인 돌봄노동자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남인순 의원 법안은 돌봄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한다

공공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7만 명 수준이 고작이다. 이조차 양질의 일자리일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보잘것없던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감액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

김은영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징검기의 연장이다. 최근에는 공공병원에서도 직접고용 전환율이 제로라는 점이 폭로되고 있다. 정부의 '돈 안 들이는' 비정규직 정책이 문제를 낳고 있다.

자회사 방안은 결코 노동자들의 바람을 반영하지 못한다.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행우회(산업은행의 직원들의 상호회사)가 설립한 용역업체 '두레비즈'에 소속돼 있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상태에서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이미 우리는 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로 고용돼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를 정규직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노동자는 말했다. "임금도 적게 주고, 아프다고 해고하고, 노조 한다고 괴롭히고 ...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자회사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해요."

자회사 방안이 통과되던 날, 노동자들은 하루 파업을 하고 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노조가 협의회에 참가했지만, 협의회 구성원 18명 중 노조의 몫은 단 4명이었다. 사측의 뜻대로 관철될 게 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그저 "들러리 세우기"만 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이 협의회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며 가로막았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정작 그 "중요 시설"의 정비·관리·미화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전환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제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양효영



조기환의원노동조합

정부와 국립대병원 사측은 노사 합의마저 내팽개치고 자회사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회사 방안 등을 정규직화로 둔갑시키고, 돈 안 들이는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다. 이 속에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줄줄이 자회사 방안을 추진했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생명·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는 전남대병원 600명, 부산대병원 487명, 전북대병원 293명 등 7개 병원, 2089명에 이른다. 그중 정규직 전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서울시·공공병원 사용자와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었다.

당시에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등 노동조합들과 노동자연대 등 좌파 노동운동 단체들은 이 합의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등 차별을 고착화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이런 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평하길, "자회사로의 고용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측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환대상, 시기, 방식을 논의하겠다"하며 사실상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관할부처인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자회사도, 별도임금체계도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장호중



사단법인 돌봄노동자

산업은행 본점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해고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엽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이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공무원의 원직 복직을 약속했다.

원직 복직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해고 등 징계가 부당했고 이에 대한 사면복권과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호봉·연급 등은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안을 내놓았다. 11월 28일까지 세 차례 교섭에서 정부는 해직 등 징계 처분이 사법절차를 통해 확정됐고, 명예 회복은 전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했다.



원직 공무원노조 설립 때문에 해고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문재인은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을 해고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해고자들이 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말하는 꼴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지도부 구속을 중단하라고 권고할 때마다, 우파 정부

가 이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이 실정법을 어겼다’며 탄압을 지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 안은 복직자의 대상 기간과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2004년 총파업으로 인한 해고자와 이후 발생한 해고자를 분리하려는 듯하다. 2004년 이후 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

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섰다는 이유로, 국정원 불법 사찰 등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도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직 대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복직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고, 해직 공무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회복투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안을 국회로 넘기려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의 보상금을 받아 지급을 시도했다가 당사자들의 거부와 사회 여론에 밀려 결국 화해치유재단이 문을 닫게 됐다. 당사자가 치유돼야 진정한 치유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진선미 의원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온 해직 기간의 임금·호봉·경력·연급 등을 인정하는 원직 복직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 탄력근로제 확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 규제 완화 추진 등 후퇴와 배신을 거듭하고 있다. 해직 공무원에 대한 원직 복직 약속 파기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 김주엽 위원장은 해직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김여진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물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를 교육·훈련시켜 왔다.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지상군 중 상당수가 특수전 부대원이다. UAE 파병이 결코 예멘 내전과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

UAE 군사협력단 온라인 홍보에 따르면, 아크부대 특전사 팀들은 중동에서 미국·영국 군대와 다양한 연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파병만이 아니라 무기 수출도 적극 지원했다. 국방부는 파병을 연장하는 이유로 무기 수출 대폭 증가를 꼽았다. “(아크부대는) 한·UAE 간 방산 수출 규모가 2005~2010년 2600만 달러에서 2011~2016년 11억 2900만 달러로 약 40배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중동에 파병하고 핵발전소 팔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국이 준 무기로 UAE가 예멘에 가서 전쟁하고 있고, 그 전쟁을 피해 예멘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실제 예멘에서는 한화가 만든 수류탄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로 온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UAE 파병에 예산을 약 92억 원이나 배정했다. 2019년 난민 예산은 깎았으면서 말이다(기존 35억 73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삭감).

소말리아 파병도 벌써 10년째 연장

되고 있다. 해적 퇴치 운운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활동은 2014년부터 단 한 건도 없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한 홍해의 출구이자 세계 석유의 25퍼센트, 한국의 수출 물량 중 29퍼센트가 통과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에서 나오는 “평화” 또한 지독한 위선인 이유다.

중동 평화를 파괴하는 한국군 부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아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workerssolidarity.org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합

마르크스21

28호 2018년 11~12월호

이론과 실천의 통합

마르크스21

28호

★ 쟁점: 현재의 이슈들

· 물락의 전설
— 장기 침체,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혁명적 좌파의 과제

· 세속주의, 무슬림 혐오,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인종차별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프랑스 좌파의 오류에서 배우는 교훈

★ 특집: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모순과 여성의 삶

· 중국 국가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압력들

· 중국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② — 1980년대부터 김정일 정권까지

★ 독일혁명 100주년

· 1918년 11월 9일 독일 혁명을 기억하라

값 11,000원

※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Tel 02-2265-6354 | Email bookmarx@naver.com

인터뷰·정리 장호종